

논술강의(3.27,토)

핵심주제

1. 북한위협(2) / 한반도 평화체제
2. 비상대비연구논총(2020년) 핵심요약
3. 비상대비(1) / 논술작성 및 정답해설

강의시간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교시 (09:30~10:30)	북한위협 분석(2) : 심화논단 · 북한체제가 붕괴되면 안되는 이유(분석) · 북한 핵폐기 협상과 향후전망	유인물
2교시 (10:40~11:50)	비상대비연구논총 2020년 46권(핵심요약) · 변화되는 북한 안보위협대비 국가비상대비 발전 · 전작권 전환과 국가차원의 대비방향 ☞ 비상대비연구논총(복사본 참조)	
중 식 (12:00~13:20)	중 식	
3교시 (13:20~14:20)	한반도 평화체제(1) · 한반도 정전협정 / 종전선언	논술교재
4교시 (14:30~15:20)	한반도 평화체제(2) ·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전략	
5교시 (15:30~16:20)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핵심) ·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 역대정부의 전작권 전환 고찰(유인물)	
6교시 (16:30~17:20)	전주 모의고사 평가 및 풀이 금주 모의고사 평가 / 작성방법 지도	유인물

제 1 교시

(09:30~10:30)

- # 1. 북한체제가 붕괴되면 안되는 이유(분석)
- # 2. 북한 핵폐기 협상과 향후 전망

#1. 북한체계가 붕괴되면 안되는 이유

I. 서론

미국 국방부는 10년 전에 만약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북한 땅을 분할 통치할 계획을 세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미확인 루머가 21일 전 세계에 비중 있게 타전되면서 '김정은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전날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측근들과 지방에 체류하고 있으며, 특히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해당 루머가 진화되는 분위기다. 전날 국정원도 '북한에 특히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고, 청와대는 그 입장이 오늘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II. 본론

갑자기 터져나온 김 위원장의 중태설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어떤 선진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 미 언론이 재를 뿌리는 형국이라는 진단마저 나온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 리스크'에 취약한 위협 국가라는 메시지가 미 언론 보도의 행간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 중태설은 국내 한 인터넷 매체가 최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국 언론이 이를 크게 다루면서 전 세계에 주요 뉴스로 타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기습적으로 터져나온 북한 지도자 건강 이상설로 최근 대중의 뇌리에 잊혀졌던 미국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다시 한 번 조명받고 있다.

가. 재조명되는 10여년전 북한 붕괴 시나리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09년 9월 9일 미국 국방부가 2010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QDR)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전격 공개됐다. 미국은 1997년부터 현재 직면했거나 향후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4년 주기로 QDR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QDR은 미국의 국방전략이나 군 현대화 계획, 국방예산 등이 총망라된 미 군부의 핵심 전략 보고서로 통한다.

당시 공개된 내용은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QDR 준비작업에 대한 평가 논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1) 북한 붕괴 시나리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파키스탄의 핵무기 통제력 상실 등 당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3개의 위협적 시나리오들과 함께 제1이슈팀이 다뤘다.

이때 미국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북한 지역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미국 국방부 QDR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붕괴 후 시나리오

2) 최초 북한 붕괴시 분할점령 계획

- 평양과 황해남·북도 지역은 점령 → 유엔통제
- 강원도 지역은 점령 → 미국과 일본이 공동통제
- 함경북도 지역은 점령 → 러시아 통제
- 함경남도와 평안남·북도 및 자강도·양강도 → 중국이 점령통제

※ 한국정부는 북한영토 어디에도 관할통제 및 점령 없음

3) 미국의 이슈팀 임무와 역할

제1이슈팀은 북한붕괴 및 핵무기 유출통제

제2이슈팀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 러시아와 발트해 연안국의 갈등과 이란문제

제3이슈팀은 미국 본토방위, 사이버 공격, 재난관리

제4이슈팀은 전세계 미군의 배치조정

제5이슈팀은 미국 국방부 내 업무 효율성 문제를 검토했다.

당시 레드팀의 7개 시나리오는 핵 공격이 포함된 북한과의 대치 상황, 옛 소련 핵무기를 입수한 급진 이슬람 세력의 미국 핵공격 가능성, 미국 에너지 생산시설 및 해저 통신망 공격 가능성, 미군 이라크 철수, 중국 대만 침공에 따른 제3차 세계 대전 발발, 파키스탄 내전에 따른 파키스탄 핵무기 안전성 상실,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 창궐 등 이었다.

나. 6년 후 '원전반대그룹'이 공개한 자료서 구체화

이러한 시나리오는 6년 후인 2015년에 해킹에 의해 일부 유출된 자료에 담긴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2009년 당시 거론된 내용과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북한 붕괴 이후 주변국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을 다뤘지만, 일부 변경이 있었다. 당시 자료에는 한반도 이북 지역 지도와 함께 '북한 지역을 4개국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합참에 요청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1) 평양 →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이 공동 담당(한국역할 확대)
- 2)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과 황해 남·북도 → 한국(한국주도하 핵심적 역할)
- 3) 강원도 → 미국담당(일본제외)
- 4)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및 자강도·양강도 → 중국(한만 접경지역 안정적 관리)
- 5) 함경북도 → 러시아가 각각 통제



※ 2015년 '원전반대그룹'이 공개한 북한 분할 시나리오

2009년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일본이 빠지고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와 분할 통제**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이 자료에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보다 중국과 마찰을 최소화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미군은 전력증강에는 관심이 없고 자국민 철수 작전에만 집중하고 있다'**거나 **'미군이 통일여건 조성보다는 영변 핵시설 제거에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등의 평가도 들어 있었다.

이에 한국 합참의장이 2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사령관의 관심을 촉구했지만 자세 변화가 없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Ⅲ. 결 론

흔히 낙관적 통일론자들은 **'북한 붕괴는 곧 남한 흡수통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일통일 경우와 같이 북한의 급작스런 변화는 특히 **아직도 준비가 덜된 남한의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해져, 단계적이고 기능론적 통일과정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붕괴에 따른 또다른 주장은 **'남한 흡수통일이 아닌 친중 정권의 탄생'**이라는 것이다. 북한 정권을 떠받드는 강력한 축은 아직도 지난 1950년 동족전쟁을 일으켰던 전범세대들이며, 이들은 특성상 과거를 반성치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절대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김정은 정권 붕괴'시 곧바로 정권을 '중국'에 위탁하는 형태의 '친중 정권 탄생'으로 이어져 쉽게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2019년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온 조중 동맹은 과거 90년대 냉전직후 **'고난의 대행군'**, 그리고 **최악의 북핵 국제 제재 속에서도 북한정권을 유지시켜 준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기에, 중국 또한 북한이 쉽사리 한국과 동맹관계인 미국 영향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출처 : 헤럴드경제 김수한사설(20년 4.22)

#2.북한 핵폐기 협상과 향후전망

I. 서론

미국·북한간 북한 비핵화를 두고 연일 날카로운 언론전을 벌이고 있으며 그 강도가 점점증하고 있는 추세임. 최근 봄페이오의 방북이 취소되어 향후 북한 핵폐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의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선택과 향후 비핵화위한 추이를 전망하고자 한다.

II. 북한 핵폐기를 위한 주도권 싸움

가. 미국의 북한 옥죄기에 맞선 흔들기

- 1) 美 존 볼턴 안보보좌관의 북한 비핵화 불가 발언 등 대북 강경기류 확산
- 2) 미국 전략자산의 대규모 동원훈련 예고 및 백악관 강경대응 지속
- 3) 북한의 핵폐기 의구심 증가 및 중국의 북한 흔들어 대북제재 혼돈
- 4) 빈손방북 우려 중국에 先무역전쟁, 後비핵화카드로 북핵협상 거부

나. 일본 언론도 북중회담에서 김정은 못믿고 중국이 대북지원으로 제재곤란

- 1) 미국의 북한판 마샬플렌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면충돌로 미중 갈등 고조
- 2) 일본 패싱우려와 미일간 군사협력을 강화한 가운데 아베수상 장기집권 시도
 ☞ 북미 핵폐기 협상 성과도달시 미국의 민간부분 북한 투자시 중국의 新 실크로드(1대1로) 구상과 맞물려 미중 패권주의 정책상호 충돌로 갈등고조

III. 북한 비핵화 과정의 주요 이슈

가. 북한 비핵화 방법

- 1)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방법 : 북한은 가급적 많은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마다 최대한 보상을 얻어내야 한다는 전략으로 상대방이 비핵화 단계중에 약속을 위반 할 경우에 대한 대응수단을 항상 보유해야 한다. 북한에게는 많은 보상과 함께 보상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계적 동시적 방법 밖에는 없다.
- 2) 미국의 일괄타결식 방법 :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 과정중에 보상만 챙기고 핵폐기를 거부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충분히 타당한 의심이다. 미국이 리비아식의 핵폐기는 어렵더라도 북한핵을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핵 폐기 단계를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경제보상 방법

- 1) 핵폐기 단계별 보상 : 북한은 비핵화 방법과 연동하여 각 단계별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 후 미국이 보상을 거부한다면 대항할 수단이 없다. 또한 중국도 핵이 없어진 북한이 더 이상 다루기 힘든 존재도 아니다.
- 2) 완전한 핵폐기후 보상 : 미국 존볼턴이 주장하는 북한핵폐기 방법으로 미국은 북한이 경제보상만을 챙긴 후 태도를 바꿀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선 완전한 핵폐기만을 주장한다면 북한이 응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완전한 핵폐기후 보상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북한 체제보장 방법

- 1) 내부의 민주화 운동금지 :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보장은 민간에서 발생하는 반정부 활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랍의 봄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것 인지 아니면 조그만 도화선이 외부의 지원으로 더욱 증폭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지원으로 아랍의 정권이 전복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 북한은 민간부분에서의 외부 민주화운동 지원도 체제보장을 위해 반드시 금기시 하여야 할 부분이다.
- 2) 외부로부터 정권교체 포기 : 미국은 인위적인 정권교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체제보장의 책임을 다한것이라 주장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보상과 체제보장을 모두 받으면서도 미국과 적대적인 중국편에선다면 북한정권을 친미정권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력이나 정보기관을 이용한 정권교체만은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내부 소요사태로 인한 북한 정권교체는 미국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할 것이다.

라. 핵 사찰 방법

- 1) 북한이 허용 지역만 사찰 :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나 미국이 지정한 지역에 대한 사찰만 허용할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약 탈퇴이유 중 하나가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지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접근이 허용되는 사찰은 북한이 피점령국가가 되는 상태이다. 특히나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사찰이 아니라 미국이 직접 실시하는 사찰이라면 북한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모욕이 될 것이다.

- 2) 의심지역 무제한 사찰 : 미국은 북한 비밀핵시설을 유지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군사시설에 비밀핵시설을 숨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비밀 핵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은 반드시 무제한 적인 핵사찰이 필요하다.

IV. 미국의 북한핵폐기 협상 전망

가. 북한의 높은 보상 요구와 미국의 낮은 보상제시의 타협점 모색에 난항

- 1) 매도자는 높은가격을 매수자는 낮은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흥정의 정석
- 2) 현재는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가격을 던져본 상황임.
- 3) 본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난관이 많겠지만 본 협상에서는 양측 요구차를 줄이기 위한 협상이 더욱 어려울 가능성 큼.
(시간만 허비될 가능성 높음)

나. 북한과 미국의 정치일정 활용한 협상 추진

- 1)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2020년 대통령재선거라는 점
- 2) 미국의 주요정치일정 가까워질수록 북한 핵폐기 대가는 상승할 것이나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미국이 협상을 포기할 위험도 있음
- 3) 북한은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조그만 행동으로 미국이 쉽게 협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큼.

다. 미국·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당근제시

- 1) 북한 핵폐기는 핵 소유자인 북한이 주체적으로 폐기하는것임. 따라서 북한 핵폐기의 주도권은 북한에게 있음. 그러나 북한에 당면한 최대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잇는 열쇠를 가진 것은 미국임.
따라서 경제발전에 대한 주도권은 미국에게 있음.
- 2)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북한판 마셜계획”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북한을 회유할 것으로 전망됨.

라. 중국의 미국압박에 대한 김빠기 전략

- 1) 중국은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와 지역안정은 원하는 바임.
- 2)북한이 미국과 적대관계가 해소되거나 또는 친미국가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 획책할 것으로 전망됨.
- 3)스스로 핵과 핵개발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예를 들며 북한의 안전보장을 책임질 나라는 중국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임.
- 4) 미국의 대북 압박에는 중국이 후원을 보장하고 미국의 회유에는 중국도 더낱은 경제보상을 약속하며 북한이 미국에 기울지 않도록 대응할 것.

V. 결 론

가. 북한과 미국의 핵폐기 협상은 단계별 과정이 될 것이다.

1) 핵협상은 협상준비-본협상-협상후속처리 순으로 과정을 거친다.

2) 협상준비 : 서로에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취소와 만남을 반복하면서 상호 자국에 유리한 협상환경이 조성되도록 언론플레이와 상황조성 등

※ 협상에서 제시할 조건들을 여러경로 통해서 발표, 상대방의 의중확인

3) 본협상실시 : 핵폐기 위한 실무단계로 북한산 핵이라는 상품과 미국의 경제와 체제보장이라는 대금이 상호 거래하는 상황의 연속과정이 될것임.

※ 북한은 최대한 비싸게 팔고 ,미국은 가정저렴하게 사려고 할 것임(경제원칙)

4) 협상후속처리 : 상호 적절한 대응과 대가로 협상이 체결되면 상호 불이행방지를 위한 보완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군사적 대응과 강경한 해상 봉쇄 등도 포함되어 한반도에 전운이 시작될 것이다. 또한 후속 처리시 북한은 자국의 민주화와 개방화 바람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고, 미국은 북한핵이 제3국이나 테러단체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 결 언 : 북미 핵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쩌면 미국이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는 것과 동독과 서독이 국경을 허무는 충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위중한 한반도의 안보환경에서 철저히 대응하고 준비해야 한다.

제 2 교시

(10:40~11:50)

★ 비상대비연구논총(46권) : 2020년 핵심요약★

1. 변화되는 북한안보 위협대비 국가비상대비 발전

2. 전략권 전환과 국가 차원의 대비방향

#1. 변화되는 북한안보 위협대비 국가비상대비 발전

I. 서론

북한 6.25 전쟁이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양적확대와 질적 현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여기에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더불어 사이버전, 무인기 등 비대칭 무기의 위협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비상대비 업무를 총괄 및 조정,통제를 수행해야 하는 부서는 축소되고 공무원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도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다.이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이 필요하다.

※ 국가 총력전 : 독일의 루덴도르프는 전시 전쟁을 지도할 지도자와 경제력 및 국민 정신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총력전(Total War)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지도자와 국민의 정신력 및 국가 경제력을 들면서 전쟁지속 능력의 핵심은 국민정신이라 하였다.

II. 북한의 안보위협 수단 및 피해양상의 변화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는 한반도 공산화 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군의 군사 전략은 기습전,배합전,속전속결이다. 이러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대남 7일작전을 수립하여 선제기습공격과 속전속결, 전후방 동시전장화를 구현하는 작전으로 특히 핵 공격전+정규전+비정규전의 배합전격전을 구상하여 3일 이내 전쟁을 끝낼 시나리오를 연구하여 활용중이다.

첫째, 북한의 안보위협 수단의 변화이다. 전쟁이후 4대군사노선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 병영국가로서 본격적이 궤도를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재래식전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력의 질적인 변화이다. 지난 노동당 창건일 75주년 기념행사에서 등장한 3층의 초대형방사포와 신형전차,스트라이커 장갑차, 다기능레이더와 신형 지대공미사일 등 현대화추세에 부흥한 질적인 발전이 있었다.

셋째, 화학 및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기의 지속적인 개발이다. 1961년 김일성의 화학화를 선언이후 핵화학방호국을 설치하여 25종의 화학무기 작용제를 2,500-5,000 톤을 보유한 것을 추정되며, 생물학무기도 천연두와 탄저균 등 10여종의 생물학 균체를 보유하여 전시후방작전 교란과 민심교란 등 공격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1955년 김일성종합대학에 핵물리학 강좌를 개설하여 북소 원자력기술 협정을 체결하여 많은 과학자를 소련에 유학시키고 핵개발 기술을 발전시켜 왔었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 제1,2,3,4,5,6차 핵실험 성공과 개발로 평가되며 특히 6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자칭 핵보유국과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 소형화,경량화, 다종화를 달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북한은 사이버무기와 무인기개발이다. 최근 김정은이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행인력도 6,8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평시를 막론하고 북한에 막대한 외화획득과 중요첩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Ⅲ. 전시 예상되는 상황 및 피해 전망

북한 노동당의 당면목표인 한반도의 적화와 이를 추구할 군사전략, 다양화되는 위협수단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전시 그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한미연합군의 상대적 우세로 북한이 기습공격을 할지라도 제한된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대칭 전력인 특수부대와 장거리포병화력, 핵무기, 화생방공격, 사이버전으로 인한 피해를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북한 특수작전부대 침투와 공격에 의한 피해 전망이다. 약 20만명이 넘는 북한의 특수작전부대는 개전초기 전후방지역으로부터 아군 전략후방 지역에 까지 침투하여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비상대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작전적·전략적 배합작전을 실시할 부대들이다.

둘째, 포병화력 및 방사포 등 장사정거리포로 인한 피해 전망이다. 개성북방지역에 위치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수천발의 포격을 수도권에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포병의 일제사력만으로 서울 한곳에서만 25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화생무기로 인한 피해전망이다. 북한이 보유한 약 5,000톤의 화생무기는 첨문화적인 숫자의 인명살상이 가능하다. 화학무기 1,000톤이면 약 4,000만명을 사망하게 할수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탄저균 100KG을 저공항공기로 살포시 동시에 100만명에서 300만명이 죽을 수 있어 1메가톤급의 수소폭탄과 같을 것이다.

넷째, 핵무기 사용시 예상되는 방사능 피해전망이다. 북한이 보유한 소형급 핵폭탄 10kt의 핵무기를 사용할시 20만명의 사망자와 1조 5,0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 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2차대전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원폭의 피해는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진행 중임을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이상의 것이 될 것이다.

다섯째, 사이버공격과 무인기공격에 의한 피해이다. 4차산업시대의 사이버공격은 초연결사회의 모든 인프라와 기반역량을 파괴할거이며, 무인기에 의한 국가중요시설과 원전시설 등 테러공격이 자행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IV. 국가비상대비업무의 현실태 및 대응책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응한 우리의 비상대비업무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먼저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한반도 전장환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한반도 전장환경의 특징과 대응

첫째, 휴전선으로부터 40Km에 불과한 수도권까지의 거리와 짧은 중심이다.

☞북한의 기습공격에 따른 대응시간의 촉박성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둘째, 수도권지역에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 그 중요성이 높다.

☞북한의 배합전과 속전속결에 대비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의 위협과 공격수단이 다양하다.

☞전시 대량피해 발생과 동시에 피해의 참혹성에 대한 철저한대비가 필요하다.

넷째, 북한의 군사전략의 변화가 없다.

☞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국제적인 공조와 한미연합방위전력의 증강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시적전권의 전환이다

☞한국의 실질적인 작전수행능력 발전과 한미연합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나. 변화되는 안보위협에서 국가비상대비 문제점과 발전

첫째, 비상대비 계획의 작성이 미흡하고 정부연습이 구체화되지 못하다.

둘째, 북한의 실질적위협에 대응한 정부 대응절차와 유관기관 협력이 부족하다

셋째, 비상대비역량의 약화와 인적,물적 등 준비상태가 미흡하다.

넷째, 재래식전쟁 양상에 특성화된 현재의 조직과 인력만으로 대응이 부족하다.

다섯째, 제도적 역량의 문제점(북한위협은 증가---->비상대비조직,인력 축소)

여섯째, 비상대비분야의 정보화 문제와 종전이후의 계획발전 부족

※ 기타사항은 비상대비연구논총 2020년 pp 62~62참조

다. 국가비상대비 업무의 발전방향

첫째, 비상대비법령의 개정과 제정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정부조직법 등

둘째, 비상대비 조직과 전문 인력의 강화

-비상대비정책국, 동원정책국, 민방위정책국, 대량살상무기대응과 등 전문분야에 필요한 핵심인력 강화로 전문성 겸비

셋째,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보완 및 연습방법의 개선

-전쟁비용과 전쟁기간, 국민생활안정 차원의 문제를 적극반영, 전시탄약,장비 등 실질적인 전쟁지속능력 역량강화, 핵 피폭시 정부의 조치계획 발전

넷째, 비군사분야의 전문성 연구 강화(최근 전쟁사례, 전장사례 연구)

다섯째, 4차 산업혁명관련 비상대비분야의 발전전략 개발, 적용

그 외에도 비상대비의 역량강화(업무, 조직, 인력, 제도, 정보화) 등

Ⅲ. 결 론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군사력을 강화시켜 왔다. 북한의 재래식전력의 양적확대와 현대화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변함없이 추진 중이다. 따라서 우리의 군사적 대응수단 증강도 필요하지만 비군사분야의 비상대비분야에서도 질적인 발전과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비상대비업무는 전시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고 정부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이 업무이다. 결국 변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법령의 제정과 개정, 비상대비 조직 강화, 비상대비계획의 개선과 질적 발전, 비상대비연습의 현실화, 비상대비 역량강화가 시급하다. 우리가 당면하는 안보의 최대위협요인은 핵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될 것이고,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는 비상대비 업무가 국가안보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전작권 전환과 국가차원의 대비방향

I. 서론

미래연합사 출범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1970년대 초부터 자주국방이 주창되고 한미동맹이 진화, 발전되어 온상징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기본틀이 바뀌는 전작권 전환은 과도하게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로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국 강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결기를 나타내며, 국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군사력운용의 자율권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위중한 안보상황하에 현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과 미군은 외국군 작전통제를 받은 적이 없다는 퍼싱원칙 주장 등 유엔군사령부와 미래연합군사령부와의 지휘관계 문제 등 한·미 전작권전환의 올바른 해결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작전통제권의 역사적 고찰과 의의 및 핵심쟁점

가. 작전통제권의 역사적 고찰

1. **작전통제권의 역사적 고찰:**6.25전쟁 당시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으로 단일 지휘를 통해 군사작전을 실시함으로써 공산주의 확산을 차단하는데 기여함. 이후 이승만대통령과 유엔군사령관의 북진정책과 휴전회담 등 갈등으로 발전
2. **휴전 이후~베트남 참전:**한미양국은 1954년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방위임무를 수행하는 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부에 둔다.라는 합의의사록 서명하여 효력발생
3. **연합사창설~탈냉전 :** 1978년 11월7일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여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이양하고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이행과 집행임무를 계속 수행
4. **탈냉전~현재 :** 그 이후 수차례 한미국방 및 외교당국자간 21세기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합의함.

☞최초 2005년 노무현대통령의 전작권 환수의지로 2006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 하여 2012년 4월 17일부 전환하기로 합의함.

그후 수차례연기와 3단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 등 추진후 20년10월14일 제52차 SCM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나. 전작권 전환의 의의와 목적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연합사 출범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대한민국 국가안보 기본틀이 바뀌는 것으로 중대한 의의와 목적이 있다.

첫째, 전작권 전환은 과도하게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로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국 강토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낸다.

둘째, 무력적화 통일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북한의 핵전략을 직시할 때, 재앙적 핵전쟁대비 전작권 전환을 통해서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있다.

셋째, 국군에 대한 전작권 행사는 국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군사력 운용의 자율권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넷째, 우리군의 기를 세워주고 국민의 자존감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다섯째, 전작권행사는 전평시 통일전략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다.

여섯째, 전작권 전환은 탈냉전이후 한미동맹이 추구해 왔던 한국 방위의 한국화가 이루어 진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일곱째, 북한군은 전작권 전환을 행사하는 한국군을 더두려워 할 것이다.

여덟째, 대한민국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에 힘입어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에 이어 자립안보까지 이루어 냄으로써 동맹의 모델로 평가

아홉째, 전작권 전환은 외교의 자율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작전지역과 군사전략에 부합하는 무기를 개발하여 싸워 이기는 군대육성은 물론, 방위산업을 진흥시켜 일자리 창출과 방산수출에 활력이 넘쳐 국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쟁점

1. 위중한 안보상황하에서 현정부 임기내 전환추진 논란

- 미·중 패권 경쟁하 미측의 우려와 북한핵과 미사일 안보상황 위중
- 전작권 전환이후 한반도 전쟁발발시 미래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갈등

2. 미군은 외국군 작전통제를 받은적이 없다는 퍼싱 원칙의 오류

첫째, 1차세계대전중 1918년 후반기 에스-마른 전투에서 프랑스사령관이 작전지역과 환경, 적정을 명확히 인지하여 미군과 영국군을 통제하 승리

둘째, 2011년 리비아 카다피에 대한 유엔 군사결의에 미국과 나토군이 참전, 미군의 전력이나 나토군보다 3배이상 이지만, 현지사령에 밝은 이태리 프랑스에게 윤번제로 작전통제권을 위임, 작전을 성공적 종료

셋째, 07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2부 작전시 벨 연합사령관은 김병관 부사령관에게 사령관 권한을 위임, 그결과 06년 벨사령관이 지휘한것보다도 훨씬 작전적 성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음.

3. 전쟁 억제와 유사시 승리하는데 어느쪽이 유리한가 논쟁

미군사령관이 연합사 지휘시 북한은 전쟁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나 새로운 한국군 지휘체계속에서는 연합방위력이 약화되고 유사시 미증원 전력도 담보 할수없다는 논리

4. 유엔사와 미래연합사와의 지휘관계 문제

유엔사와 미래연합사로 이원화된 지휘체계를 들어 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두 개의 전쟁사령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전시에는 미래연합사 대신 유엔군사령부가 전쟁사령부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

III.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비방향

가. 국민의 자립 안보의식 함양

- 1. 결사항전의 민족사
- 2. 번영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나. 정부차원의 총체적 안보역량 강화

- 1. 국가안보회의 기능 강화 및 국가급 차원 전쟁지도체제 확립
- 2. 예비전력 관리 및 전시 동원태세 구축
- 3. 국방비 GDP 대비 2.9% 증액
- 4. 안보환경 개선

가)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 : 비핵화, 평화협정, 남북군축 등 전쟁위협감소

나) 동북아 안보환경 개선 : 한미일 북핵공조체계, 한미중 전략대화, 동북아평화협력 제도화, 한중일 3국협력,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대응,

다. 동맹외교를 통한 전략적 소통

1. 대미 전략협의 기초

- 가)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전쟁수행능력 인식과 능력제고
- 나) 전작권 전환 교훈과 이전정부 합의를 존중하는 것
- 다) 미측의 강경지한파와 온건지한파의 시각을 종합적 고려 접근

2. 총체적 소통

조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미정부차원, 국방당국, 군사당국, 민간차원에서 총체적 소통이 필요하다.

IV. 결론 및 정책제안

전작권 조기전환은 국민,정부,군이 3위일체가 되어 추진할 때 가능할 것이다.

첫째, 국민차원에서 국민의 자주국방과 안보의식 제고, 둘째, 정부차원에서 NSC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급 차원에서 전쟁지도체계를 확립, 국방비의 실질적 증가로 자주국방역량 강화, 셋째, 군차원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수 있는 핵WMD 전략적 타격체계 조기구축과 북핵대응 TF구성 등 상부구조개편이 필요함. 넷째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측과 동맹외교는 전략적 소통에 주안을 두고 추진

역대정부의 전작권(핵심요약) : 교재외 참고자료

가. 최초발단 배경 :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한국군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임명

1979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가 창설되면서 이쪽에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지휘계통에 개입이 가능해졌다. 한미연합부사령관 겸 지상구성군 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에 참모진의 절반이 한국군 출신으로 보직됨 → 한국군 위상제고

나. 노태우 대통령 공약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정책반영

다. 미국과 2년의 협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 1) 김영삼 정권 때 평시작전통제권은 1993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환수
 - 2) 군 장성들의 반발과 합참이 과연 작전지휘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 3) 2년의 유예기간 거쳐 1995년에 전시 작전권까지 완전 환수한다는 일정이 합의
 - 4)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1994년 전쟁위기설
- ☞ 1995년 전시 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

라.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전작권환수로 합의(한미 합의)

마. 이명박 정부시기에 안보공백 우려로 인해 2015년 12월로 연기

바. 박근혜 정부시기인 2014년 10월에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조건으로 재 연기 합의

사. 2017년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방개혁 핵심 목표

- ☞ 전작권을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한국군에 조기 환수 하겠다는 입장발표
- ☞ 이후 임기내 반환으로 정책변경하여 한미연합훈련실시 지휘능력 검증

박근혜 정부의 전략권 전환(핵심)

<p>가. 한미 안보협의회(SCM)합의</p> <p>1.편성/지휘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전구작전 주도가능한 조직으로 개편 -전구작전수행체계구축(합참주도-미군지원) <p>2.능력/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맹군사능력과 연합작전수행체계 구축 -한미군사협조체계 구축(지휘관계보장) <p>3.연습/검증/기반체계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합연습체계 및 신작전계획 수립(정전/전시) -검증,한국합참과 주한미군사 등 종합적평가 -인적, 물적, 법적, 기반과 근거마련 	<p>4.계획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지도발/전면전 등 신규작계완성 -관련약정,전략지시 등 전환시 유효화조치 ※주한미군재배치(용산기지,연합토지관리) 등 <p style="text-align: center;">※ 우리정부의 추가적인 대비방향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정부차원의 전쟁지도 능력 구비 2.새로운 한미연합작전수행 체제정립 3.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 확충 4.전쟁소요 물자확보, 정부 증무계획보완 5.북한 WMD 위협 대비책 강구
---	---

문재인 정부의 전략권 전환(핵심)

가. 대통령 안보정책 과제로 선정

☞ 임기내 전시작전권 전환→ 조속한 시일내 전환으로 변경→ 임기내 전환

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방어적 성격을 작전을 수립하고 온전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함.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전략권이 환수되지 않는 한, 국익에 기반 한 한미동맹의 건설이나 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함.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와 주권, 국익에 입각한 양국의 협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 전략권 환수가 필수적임.

② 방위비 분담금, 환경오염 정화 등 막대한 동맹 비용 재검토

주한미군 주둔 비용부담 방식도 재검토해야 함.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협정을 맺기로 한 이래 방위비 분담금은 여전히 자동 증액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에 대한 검증도 한국정부가 사실상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018년 예정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는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제대로 점검하고, 한국 시민의 부담을 합리화해야 함

③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정부가 맹목적으로 한미동맹의 정신과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침해받아온 사법주권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정보 비공개 등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 SOFA 개정** 등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전작권 환수에 대한 찬반(요약)

가. 전작권 환수 반대 입장

- 1) 한미동맹 약화 우려: 기존체제보다 약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제한, 전력약화 등
- 2) 동북아 지역의 안보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환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치명적
- 3) 한국정부와 합참의 독자전인 전시작전 수행능력 제한(감시/정보, 타격자산 등)
- 4) 대외신인도 하락 및 경제안보적 리스크로 작용
- 5) 미국과 동맹국 대부분이 연합작전형태로 운영

나. 전작권 환수 찬성 입장

- 1) 주권차원의 안보자주권 확립
- 2) 미군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국방자위권 확립
- 3) 한반도 통일의 역할론, 한반도 통일의 주역과 당위성 확보
- 4)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및 동북아 전략적 균형자 역할 등

제 3~5 교시

(13:20~16:20)

3교시 : 한반도 평화체계(1)

☞ 한반도 정전협정 및 종전선언

4교시 : 한반도 평화체계(2)

☞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전략

5교시 :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핵심)

☞ 논술 교재 참고

제 6 교시

(16:30~17:20)

- # 1. 전주 모의고사 평가 및 풀이 설명
- # 2. 금주 모의고사 실습 및 작성방법 지도

#1. 전주 모의고사 평가 및 풀이 설명

문제1) 북한 급변사태시 정부차원 대응방안과 주변 4개국 대비책 분석

총평 : 최우수(A++) 97점

1. 서론

최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압박과 경제 제재가 지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은 경제난 및 코로나 대응 실패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에 북한 급변사태 발발시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과 동북아 4개국의 대응 방안을 국가이익적 측면에서 논해보기로 한다.

11. 북한 급변사태시 우리나라 정부차원의 대응 방향

특정 국가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해당 사태로 인한 주변국 영향 분석 및 해당 사태 이후 해당국가가 어떠한 형태로 안정화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 사태의 국제적 처리 부분과 현지 안정화 등 내부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개념기술 양호:너무많다!)**

가. 북한 체제의 미래 비전 제시 및 국제적 대응 유도

첫째,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며, 북한 급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세계 10대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국제사회에 강조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은 오랜 세월 폐쇄된 정치체제와 독재권력에 세뇌되어 왔으므로 타국에 의한 개입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것이며, 언어와 민족이 동일한 대한민국이 주축이 되어 급변사태 해결에 나서는 것이 가장 평화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임을 UN 등 국제기구에 호소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지역은 장기간 인권 유린과 비민주적인 정부 운영이 일상화되었던 지역으로, 북한 주민은 공산당 권력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과 동시에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못한 중국이나, 민주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러시아의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여 줄 것을 호소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북한 급변사태 해결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겠으나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주도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불필요 증언적 내용:삭제)**

나. 북한지역의 신속한 안정화와 내부갈등 해결

첫째, 북한 급변사태가 조기 해결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치안확보 및 무장의 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편성중인 신속 기동부대가 평양지역에 조기에 전개하여 북한 군부의 핵심세력을 확보하고 급변사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정부에 적극 협조했던 독재세력과 현지 주**

민을 분리하여 새로운 내부갈등 발발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삭제가능)

둘째, 한국 정부 주도로 북한지역 또는 DMZ 인근에 대량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북한 이탈 난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대량난민의 주변국 확산은 불필요한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 정부 주도의 급변사태 해결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향후 북한지역 복구 및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므로 최대한 기존 주거지역 인근에서 수용 후 귀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삭제가능)

셋째, 장차 북한지역 복구 및 경제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조기에 제시하여 북한주민의 민심 이반을 예방하고 북한 주민 스스로 대한민국 주도의 급변사태 해결을 지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은 UN에 가입되어 있는 독립국가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주도의 급변사태 해결에 거부감을 보인다면 중국 등 주변국가의 개입이 정당성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북한의 중국 위성국가화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III. 북한 급변사태시 주변국 기존인식과 국가이익적 측면 분석

국가가 특정 사건을 자국의 이익으로 인식하는 기준은 국가의 전략적 이익과 존망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활적 이익, 국가의 주요 이해관계와 밀접한 작용을 하는 핵심적 이익, **(그리고 주요 관심사이기는 하나 국가의 당면 목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수적 이익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주변 4개국가의 세부현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가. 미국은 장차 최대 라이벌 국가로 부상할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사활적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 지역은 중국의 동북지역 영향력 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 지역이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미국의 전략적 이익 수호에 장애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경우, 일본은 동해 및 대한해협 인근의 안정화를 위해 군사력 전환 배치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이는 호주 등 남태평양 인근 국가의 안보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미국의 태평양 지역 전력부족이 가속화될 것이다.

나. 중국은 일본에 대한 견제, 러시아와의 교류 확대, 동북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 감소를 위해 사활적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관여할 것이다.

첫째,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자국의 군사력 투입해서 전쟁을 수행한 적도 있는 핵심지역으로써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자동으로 미군 주둔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기조 유입과 조선족 등 소수민족 통제가 어렵게 되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둘째, 한반도 지역이 대한민국 주도로 안정화되면 미국과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인근국들은 현재의 군사력을 동북아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자유롭게 투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신속대응군으로 개편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수시 전개된다면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영향력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다. 일본은 한반도 지역이 중국 주도로 개편되는 것을 견제하되, 대한민국 주도가 아닌 국제사회 주도로 안정화되고 그 와중에 일본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핵심적 이익으로 한반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지난 역사를 고려할 때 군사적 협력은 제한되겠지만 대신 국제원조와 개발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경제적 협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장차 중국의 동북 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 러시아는 지속된 경제난과 정치체제의 취약성,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를 부수적 이익으로 취급하고 다른 3국보다는 적은 수준의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유럽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기조를 감안하면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편승하여 철도 개설, 가스관 설치 등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려 할 것이다.

IV. 결 론 (핵심요약 및 방향제시 우수)

독일 통일은 국제사회 뿐 아니라 당사국들도 미처 예상치 못하게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통일독일은 EU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일의 풍부한 경제력을 가지고도 동독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수없이 많은 난관을 겪어야 했으며, 구 동독지역은 아직도 낙후된 인프라와 저성장의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시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북한지역의 안정화 및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중국 등 특정국가의 일방적 개입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미국과 일본, UN 등 국제기구의 전폭적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변 4개국의 한반도 인식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미·중·일·러 각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각국의 입장에 맞는 대응방안을 연구·분석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한반도 지역의 주역으로써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끝.

문제2)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우리정부의 효율적 대응 방안

총평 : 우수(A++) 96점

1. 서론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은 극렬한 대립관계를 지속 유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웅산 폭탄테러, 판문점 도끼만행 등 전면전쟁 위기도 있었으나 냉전 종식 후 세계 각국의 이념 대립은 점차 완화되었고 남북관계 또한 교류·협력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 예상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3대 세습과 주민 감시·탄압을 기초로 한 독재체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효율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서론기술 우수)

11. 본론

북한은 건국 이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야욕을 시종일관 유지하여 왔다. 냉전 시절 북한은 중공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 자체 동원에 의한 군사력 건설을 야심차게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는 경제난과 외부지원 축소로 인해 예전만큼의 군사력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한된 자원과 기술력으로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왔는데 여기서는 특히 비대칭 전력과 탄도미사일 등에 주안점을 두어 분석해 보겠다.(본론 개념기술 양호)

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실체와 실효적 대응방안

첫째는 휴전선 인근 지역에 배치된 장사정포 등의 위협이다.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170mm 이상 포병전력과 240mm 이상 다연장 로켓은 발사 지속시간이 짧고 재장전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정확도가 낮아 현대 전장에서 효용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사정포 등을 휴전선 인근에 배치하는 이유는 수도권 전역의 비군사적 목표에 화력을 집중, 민간 피해와 혼란을 야기하고 한미 연합군이 장사정포 제거 임무에 투입되어 북한 내 전략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미연합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Kill-chain의 타격주기를 보다 단축하고 대포병전력, 중형 무인기 등 전술자산을 확충하여 한미 연합의 전략적 타격능력이 장사정포 제거 등의 전술목표 제거에 소진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대응방향 제시

둘째는 핵실험, 핵시설 공개를 통한 압박이다.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재는 UN 대북재제 및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더 이상의 핵실험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 기폭장치 개선을 통한 신뢰성 향상,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공개 등을 통해 자신들의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게 되면 그 순간 전술적 타격능력만으로는 북한의 군사력을 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한·미 뿐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역내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여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아시아 국가들의 핵보유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을 제재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대응방향 제시

셋째는 사이버테러, 남남갈등 조장 등 행위이다. 사이버테러는 디도스 공격, 정보탈취 등 비군사적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군의 주요 데이터 서버마비, 통신망 차단, 허위정보 전파 등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단도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질적 전산보안점검, 통신망 신뢰성 향상을 위한 수단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대응방향 제시

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종류 및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은 60년대 이후 중국과 중동 등지에서 소련제 프로그, 스커드 미사일을 밀수하여 역설계를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후 반세기 계 탄도미사일 개발에 매진하여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이다. 스커드 미사일은 처음 북한이 복제 생산하기 시작한 미사일으로써 시리아·이란 등에 수출되어 실전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 스커드 계열의 사거리가 500km 전후이지만 북한계 개량형은 로켓 모터 개선 및 연료량 증가로 700km 가까운 사거리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구형미사일 특성상 비행 궤적이 단순하고 명중률이 낮아 패트리엇 등 기존의 방공전력으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므로 대비태세 강화, 유사시 대피훈련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둘째는 김정일 시대 개발된 광명성 시리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 계열은 북한의 기술수준 제한으로 신뢰성이 낮고 주변국의 반발로 인해 충분한 발사 시험을 거치지 않아 실제 전시 투입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북한은 정밀제어 기술이 부족하여 탄도미사일 탑재 핵탄두 기폭장치의 작동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소재기술 미비로 재돌입체 보호덮개 완성이 지연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핵개발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탄도미사일의 발사도 성공한 사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배치 숫자가 제한적이고 발사를 위한 준비과정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상시 분석하고 발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선제적 타격수단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비방향 제시

셋째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다. 최근 북한이 개발중인 신형미사일은 중국제 GPS와 서방제 제어부품을 대폭 사용하여 신뢰성을 높였으며 고체연료를 대폭 사용하여 발사 준비시간이 짧고 종말 돌입단계에서 궤도 수정이 가능하여 명중률 향상 및 요격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증가되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KAMD 체계 뿐 아니라 미·일 등 우방국과의 연합 탄도미사일 방위체계 구성, 한 국형 순항미사일 등 응징보복수단 확보를 통해 공세적 대응방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의도와 우리의 방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정권 인수 초기부터 위성발사를 빙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신형 단거리미사일 개발 등을 추진하여 왔는데 그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스스로 핵 공격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현재 NPT를 탈퇴한 상태이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핵무기 자체보다는 안정적인 투발수단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핵무기 사용능력이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탄도미사일을 통해 유사시 핵 타격능력 확보, 장거리 무력투사 가능이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군사적 공세와 주변국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체제 안정성을 높이고 정권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는 심정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유사시 정권 전복을 노릴 수 있는 정권 전체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적극 개입과 주변국의 도움을 확신할 수 없는 환경적 한계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정기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북한이 동북아 안보를 위해 적극 관리해야 할 주요국가임을 강조하고,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대북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국제적 고립 상황이나 내부 경제위기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개발·발사실험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고, 대북지원 재개나 국가간 협의가 진행중일때에는 이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전술적·전략적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래의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적극적 군사조치로 대응하여야 한다.

III. 결론

북한은 70년대 이후 대한민국과의 체제 경쟁을 포기하고 독자적 생존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 주요수단으로 핵과 탄도미사일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선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호한 태도로 북한과의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끝.

논술시험 1차

2021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1 문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

남북미 정상은 지난 판문점 회동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조속히 실시하고 북미가 비핵화 실무협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시설 신고 및 검증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주한미군 감축만 이뤄질 경우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없이 한미동맹만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다음질문에 답하시오.(총 15점)

- 1) 한반도 종전선언의 의의와 동북아 4개국(미, 중, 러, 일)의 종전선언에 대한 4개국 의도에 대하여 논하라.(7점)
- 2) 북한의 종전선언 체결의도와 우리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라.(8점)

정답 및 해설

문제 1 논술핵심(요약)

제목 : 한반도 종전선언관련 동북아 4개국 의도와 북한의도 및 대응방향 제시

1. 서론

- 최근 이슈 ○ 북한의 종전선언 의도 ○ 대응방향 필요성 ○ 논술 전개 순서

11. 한반도 종전선언의의와 동북아 4개국 의도분석

가. 한반도 종전선언의 의의

1) 정의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전쟁 상태인 '정전' 과 '휴전' 과는 차이가 있다.

2) 의의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공동의 의사 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로,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이다. 즉,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종전협정을 체결하기전까지는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들 간의 공식적인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나. 동북아(미,중,러,일)의 의도분석

1. 미국 의도 : 선북핵 문제 해결후→경제적 조치, UN제재 단계적 해결

*1차 북미정상회담 :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선행요구, 한미훈련 중단 등

*2차 북미정상회담 분석(의도)

①북한 풍계리핵실험장, 영변핵시설 파괴↔미국 제재완화 맞교환 가능성 능후

②ICBM, 중·단거리 모든 미사일 폐기↔주한미군 감축과 한미훈련 중단

③단계적 비핵화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북핵 문제해결로 접근

※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은 채택불가

-4개국정상(남,북,미,중)서명하는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 낮음(미·중 대화없다고발표)

☞ **전문가 견해 : 비핵화의 구체적 성과없이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협 작용**

북한의 핵시설 신고 및 검증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종전선언이나 주한 미군감축만 이뤄질 경우 비핵화 성과 없이 한미동맹 약화초래

2 중국 의도 : 적극참여, 한반도 정세변화와 판도변화에 민감, 4자간 종전선언

-종전선언은 6·25 전쟁의 법적 및 제도적 종결이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치적 선언의 방향으로 추진된다"면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장치인 평화협정과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 상황이 달라졌음을 시사

- 최근 남북한과 미국에 중국이 참여하는 4자간 종전선언을 중국이 미국에 제안했다고 했다"면서 "중국은 종전선언이 법률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상호 신뢰에 관한 선언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

3. 일본 의도 : 초기발표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 비핵화 사찰 비용대납 의도

-미국과 일본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 남북한 문제에 일본패싱 극대화 관심, 북일직접대화 언급

-남북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시기상조라는 기존입장 반복, 일본인 남북자문제에 대해선 적극관심

-일본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 초기비용을 부담할 의향과 아베총리의 북한 김정은과 직접대화과 일본패싱 방지에 집중

4. 러시아 의도 : 한반도 종전선언관여, 시베리아 지역개발과 인프라확대 모색

정전협정 당사국은 아니지만 지정학적으로 북·중과 이해관계를 함께 해온 러시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과정에 적극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김위원장에게 푸틴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며 북·러 관계 정상화 의도

III. 북한의 종전선언 체결의도와 우리정부의 대응방안

가. 북한의 한반도 종전선언 체결 의도

1. 정치적 선언으로 폄하

노동신문은 '종전선언은 한갓 정치적 선언'으로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종전 종전선언 채택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

2.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을 구상하는 것은 6·25전쟁 종결을 공식화
 첫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켜 외부간섭배제, 둘째 주한미군 철수의 국제적 명분화
 셋째 한·미연합대비태세 약화로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 → 한미동맹 약화
 합의 후에는 전쟁이 종결됐다고 해놓고 왜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 한·미동맹
 등의 한미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여론선동과 국제적 모략활동으로 한국고립화
 넷째 남한 내 극론분열 조장으로 남남갈등 조장으로 극심한 이념적 대립으로
 국가적 차원의 혼란한 정치, 경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하 정국조성
 북한은 그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무력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것임

3. 소결론 : 북한의 실질적인 핵폐기 없는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약화 초래

- 북한체제 보장과 경제지원은 북한의 핵목록과 핵물질제거 등 실질적 비핵화접근
 으로 핵시설 영구불능화에 상응한 조치가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실효적 실시
- 북한 체제보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실질적인 핵폐기가 선행되어야함

나. 우리정부의 대응방안

- 1) 한미 공조체제하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유지
- 2) 북한의 진정성 파악 및 실질적인 핵폐기 방안 모색
- 3) 국민적 합의 및 남남갈등 대비책 강구
- 4) 자주국방태세 확립 및 철저한 북한의 화전양면 절술에 대비
- 5) 국제사회와 UN과 교류 및 공조체제 유지 등

IV. 결 론

- 본론내용 요약 ○ 주장의 요약 ○ 한반도통일 기대효과 ○ 고사성어 등

북한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을 요구 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도발을 자제하고, 남한과의 교류· 협력
 에 진실로 응하면 된다

논술시험 2차

2021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2 문 최근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둘째 주에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연합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뉘 휴일을 빼면 총 9일 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제 병력이 투입되는 실기동 훈련(FTX)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다만 훈련 수준과 규모 등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북한 반발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인 기본운용 능력(IOC)을 갖췄는가를 파악하고 한국합참의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 능력을 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물음에 답하시오(15점)

- 1)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의의와 찬성 및 반대입장을 기술하라.(5점)
- 2) 안보상황을 고려한 전작권전환시 우리 軍과 국가차원의 대비방향을 기술하라.(10점)

문제2 : 논술핵심(요약)

제목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의와 우리軍과 국가차원의 대비 방향

I. 서론

가.문제상황, 최근북한 위협 / 경향

나.전작권 전환의 의의, 논술전개 순서 / 미래비전 제시

II. 본론

1. 전작권 전환의 의의, 역사, 개념 등

2. 전작권 전환의 찬성 및 반대의견

3. 전작권 전환시 우리군과 국가차원의 대비방향

III. 결론

가. 논고요약 / 자신의 주장언급 / 발전방향 제시 등

1. 서론

최근이슈 / 자주국방 중요성 / 북핵 위협대비 필요성 / 논술 전개 순서

II.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배경과 찬성 및 반대의견

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배경의의

1994년 12월1일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던 한국군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정부가 환수함으로써 44년 만에 평시 작전활동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가능,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한국군이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을 때 환수한다는 조건 설정으로 인하여 그 환수 시기가 무기한 연기, 하지만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주권국가의 국군으로서 거듭 새롭게 변신하게 될 것으로 기대

나. 반대 및 찬성입장

1) 반대 의견

① 한미동맹 약화 우려

한미동맹의 긴밀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와 한국군사능력의 상대적 열쇄

② 한미간 군사력 연계성 제한 우려

대한민국이 단독행사하면 두게 될 연락장교단으로는 한미 간 연계가 불충분하며, 상설적인 연합사령부가 필요하다는 의견. 평시부터 늘 동등하게 한 자리에 앉아서 한미연합정보판단, 한미연합작전계획,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어야 팀워크가 형성

③ 미국 전쟁경험 미공유 우려

미국은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등을 통해 많은 실전 경험으로 더 높은 전술적, 전략적 능력 때문에 전시에는 한국보다 더 높은 지휘력 발휘

2) 찬성 의견

- ① 미국 역시 정치 외교적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지지
- ② 미 행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항구적으로 보유할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음
- ③ 동아시아주둔 미군의 장래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여 주한미군 3단계 철수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체제의 개편도 구상

III.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 우리군과 정부의 대응방향

가. 우리 軍의 대비방향

1)편성 / 지휘구조

한반도 전구작전 주도가능한 조직으로 개편/전구작전수행체계 구축(합참주도-미군지원)

2)능력 / 체제

동맹군사능력과 연합작전수행체계 구축 / 한미군사협조체계 구축(지휘관계보장)

3)연습 / 검증 / 기반체계분야

연합연습체계 및 신작전계획립(정전/전시)/ 검증,한국합참과 주한미군사 등 종합적 평가
인적, 물적, 법적, 기반과 근거마련 / 한미군사 기반체계 구축 및 안정적 운영

4)계획분야

-국지도발/전면전 등 신규작계완성 / 관련약정,전략지시 등 전환시 유효화 조치

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비방향

1. 국민의 자립 안보의식 함양

가) 결사항전의 민족사적 의의 나) 번영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2. 정부차원의 총체적 안보역량 강화

가) 국가안보회의 기능 강화 및 국가급 차원 전쟁지도체계 확립

나) 예비전력 관리 및 전시 동원태세 구축

다) 국방비 GDP 대비 2.9% 증액

라) 안보환경 개선

1)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 : 비핵화, 평화협정, 남북군축 등 전쟁위협감소

- 2) 동북아 안보환경 개선 : 한·미·일 북핵 공조체제, 한·미·중 전략대화,
동북아평화협력 제도화, 한·중·일 3국협력강화, 초국가적 위협공동대응

3. 동맹외교를 통한 전략적 소통

가. 대미 전략 협의 기조유지

- 1)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전쟁수행능력 인식과 능력제고
- 2) 전작권 전환 교훈과 이전정부 합의를 존중하는 것
- 3) 미측의 강경지한파와 온건지한파의 시각을 종합적 고려 접근

나. 총체적 소통력 강화

조기 전작권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미정부차원, 국방당국, 군사당국, 민간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

IV. 결 론 (최소 4줄 정도 기록)

1. 앞의 내용기술, 문제점 개선사항, 발전방향, 기대효과 등 제시
2. 한미동맹 강화와 국민적성원, 고사성어, 결론 등 자신의 주장 등 제시